정청래 "정년 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 노동계 의견 경청"

민주당 대표, 민노총 방문 정책 간담회…"당정, 노동 존중 사회 목표" 양경수 위원장, 작업중지권·초기업 교섭·근로기준법 확대 등 요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 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라며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인 동시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하다" 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며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며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며 "노동자의 산업재해 희생을 막아내도록 이 부분에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통한 노동법 사각지대 축소,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 화 등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세심히 살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교원 공무원(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한 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하더라도 향후 20년간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 하다"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또 노동자 작업중지권, 특수고용노 동자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 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이라고 꼽으면서 "노동자를 위해 입법 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한미 관세협상을 '미국의 조공 강 요'로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내란 수괴가 구속되고 정권이 교 체됐는데 노동자·서민이 느끼는 실질적 변화는 크 지 않다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이 많다"며 "국회 가 욕설·폭언·정쟁으로 가득 찬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내란 세력과 말싸움으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 민생·사회 대개혁 의제에 속도를 내 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관세협상에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와 별개로, 그 결과가 우리 경제와 노동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계엄·내란에 맞서 거리에서 싸웠듯 조공을 강요하고 자주권을 위협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대표는 "트럼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애국심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노동 현장 현 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 인다"며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목표는 민주당, 민주노총의 공동 목표"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시도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추모탑 앞 5초 묵념…장동혁, 5·18 묘역 참배 무산

시민단체, 국힘 대표 방문 저지…5·18 단체 간담회도 불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6일 광주 북구 국립5 ·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단체 등의 제지로 공 식 참배가 무산됐다.

6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 날 오후 양향자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함께 5·18민주묘지 민주의문에 도착했으나 시민단체의 참배 반대로 묵념만하고 현장을 떠났다.

장 대표는 경찰의 엄호로 추모 공간 인근까지 간 신히 진입했지만 몸싸움이 이어지며 동선이 막혔 다. 결국 장 대표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제단 옆에 서 5초간 묵념한 뒤 발길을 돌렸다. 묘역 도착 후 떠나기까지 19분에 불과했다.

장 대표는 예정했던 박관현·이한열 열사 묘역 헌화와 5·18 단체 간담회는 진행하지 못했다. 단체들은 '5·18 정신 훼손하는 장동혁은 물러가 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장 대표를 막아섰다.

이들은 장 대표가 광주지법 판사 시절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 불출석을 허가해 재판을 지연했고, 5·18 북한 개입설을 제기한 후보를 옹호했으며, 내란 옹호 발언과 함께 구속된 윤석열 전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고주장했다.

안태욱 국힘 광주시당위원장은 "장동혁 당대표의 5·18참배가 무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관계와다르다"면서 "참배에 동참한 시민과 당원들의 도움으로 참배 반대저지를 뚫고 5·18민주화운동추모탑까지 가서 '오월영령께 묵념을 드렸다'"고 밝혀다

gur. 장 대표의 이번 방문은 취임 후 첫 호남 일정이 었다.

장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스러진 오월 영령 앞에 고개 숙인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5·18 정신을 훼손해 온 당의 지도부가 형식적 추모로 책 임을 덮을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후 광주 종합쇼핑몰 부지와 AI데이 터센터를 방문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5·18참배를 막는 것은 오월정 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면서"앞으로 매월 호남을 방문해서 진정성 있게 광주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과거 언행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치르는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5·18 왜곡과 내란 옹호의 연장선상에 선 위선적 정치쇼"라고 규정하며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병호기자 jusbh@

고성 오간 운영위 국감, 1시간만에 파행

여야, 주진우 이해충돌·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놓고 공방

6일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는 여야가 김현 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를 놓고 극심한 갈 등을 빚으면서 59분 만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도 있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 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주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대통령실을 그만둔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의 발언에 여당에서 항의가 이어지면서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민주 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게 옳으냐"며 국감 시 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국감 정회 후 여야가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는 과 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현 의원 간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회 후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쳤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됐으 나, 불행히도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있는 운 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 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피 해자는 저인데 폭력배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규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실 인사 투명·민주적"

운영위 국감 출석…"국정자원 화재, 매뉴얼 따라 조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정부 및 대통령 실에 대한 인사 문제와 관련해 "제가 인사위원장 으로서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 석,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인사에 있어 특 정 인물이 실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 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강 실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

정안전부 장관 모두가 긴급 점검 회의를 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글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매번 위기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의 콘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물어보는 일이 되풀이되 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